



## 사회경제적 불평등 사회에서 한국 언론학 연구의 경향\*

채영길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언론학 연구의 빈곤에 대한 인식과 개념의 관념성을 비판하고 학술적 실천을 탐색하기 위하여 첫째, 한국 사회에서의 빈곤과 불평등의 양상과 특성을 파악하고 둘째, 경제적 불평등에 처한 개인과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고, 셋째, 언론학이 분석하고 이해하는 빈곤의 정치커뮤니케이션 과정과 목표의 문제들 및 연구 방식의 한계를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빈곤과 불평등의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실천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우선, 한국 언론학은 사회 및 경제학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온 미디어, 참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결핍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진행해 오고 있었다. 이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사회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의미를 확장시켜주고 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뚜렷한 한계 역시 보여주고 있다. 분석에 의하면 한국 언론학은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네 가지 유형화 중에서 <Type III> “관념적 유형”에 다수의 연구가 분포되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언론학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KEYWORDS** 언론학, 정치커뮤니케이션, 빈곤, 불평등, 커뮤니케이션 불평등, 숙의민주주의

\* 이 논문은 2020년 가을철 한국언론학회 정기학술대회 대주제 세션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 chaeyounggil@gmail.com

## 1. 서론

우리의 익숙한 태도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폭력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빈곤층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도 그러하다. 우리는 자주 빈곤에 대해 적당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듯이 행동한다. 비록 빈곤에 처해 있는 개인과 공동체는 거의 예외 없이 경제적 불평등과 그로 인해 정신과 신체적 고통 그리고 상실해 가는 관계들을 일상적으로 경험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주장할 목소리가 박탈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자존감마저도 결핍되어 있다(Desmond, 2016). 그렇기에 알려져 있지 않은 그들의 비참은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우리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다(Bourdieu, 2000). 이러한 무지에도 불구하고 (혹은 무지해서) 우리는 빈곤층에 처한 이들에 대해 적당한 관심과 우려로도 충분하다고 인식하며 스스로의 관용에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평안을 갖는다. 그러나 일단 그들의 결핍된 삶의 곤궁한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는 순간 이러한 ‘적당한’ 수준의 관심 표명은 위선적일 뿐 아니라 심지어는 폭력적이기까지 할 수도 있음을 즉시 깨달을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삶의 상당부분이 소비와 거래에 의해 유지되고 개인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가 경제적 자유와 역량에 의해 결정되는 현대 사회에서, 빈곤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전면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황폐화시키기 때문에(조문영, 2019; 조정진, 2020), (공감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러한 현실을 목격했을 경우에 적당한 관심과 우려만을 표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과 관련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경제, 사회, 문화적 불평등이 포편화되어 있고 삶의 조건이 되어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의 실체와 관련한 지적(知的) 논의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미디어학자들은 분명히 9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두 가지 사회의 급진적인 재조직화 - 미디어화와 불평등화 - 를 동시

에 경험하면서도 이 두 가지 특수한 사회화 과정들을 함께 병렬시키면서 논의하는데 소홀해 온 것이 사실이다. 빈곤한 현실의 보편성이 불평등한 삶을 오히려 무감각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불행하게도 이는 사실이 아니다. 불평등에 대한 담론은 없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경향성을 띠고 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에서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더 ‘고귀한’ 평등 - 예를 들면 합의와 협상을 위한 보편적 정치 참여와 같은 - 에 종속되어 주변화된 요소로 취급되거나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비롯되는 경제사회적 결핍 상태를 오히려 전혀 다른 관념적 상태 - 뉴스, 정보와 데이터 빈곤 - 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다. 주변적이거나 추상적인 차원에서 정의되고 측정되는 빈곤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 현실의 빈곤 상태를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어도 빈곤 상태를 극복하고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언론을 포함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총체적인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의 다양한 수준의 주체들의 얽히고 설킨 관계와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적 상태에서 그 형태가 일부라도 파악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Kim & Ball-Rokeach, 2006), 빈곤한 삶의 빈곤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방식과 내용은 그러한 관념성과 추상성을 벗어나 개개인이 몸으로 직접 체화하고 마음으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을 때에 가능하다(김예란, 2020). 이는 우리의 논의가 구체적이며 진지한 분석과 이해의 토대에 기초해야 함을 의미한다.

언론학 연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빈곤과 그에 따른 불평등의 조건과 결과들에 대해 적당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충분한 듯이 처신해 왔다. 그렇기에 빈곤에 대해 언론학은 어느 정도 정치윤리적으로 폭력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언론학 연구들에 따르면 빈곤은 언론 보도에 의해 왜곡되어 있으며(채영길, 2016; 탁장한, 2020), 경제적 결핍은 정보와 미디어 접근과 이용의 결핍과 주로 관련되고(김은미·정화음, 2007; 이숙정·육은희, 2014; 황승연·윤영민,

1998) 이는 빈곤한 개인과 공동체의 심리적 상태와 사회적 개입에(김희조·조재호, 2015; 김춘식·양승찬·이강형·황용석, 2005; 이나연, 2017; 최선영·고은지, 2019)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증명해 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빈곤의 경제적 결핍 상태가 이야기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과정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소외 현상에 주목하며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있어서 불평등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다.

하지만 미디어 및 정보 격차와 정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전제하는 불평등성은 빈곤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조건과 방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극복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들은 실제 빈곤 계층에 속한 개인과 공동체를 억누르는 구조화된 소외와 박탈의 맥락을 반영하는데 소홀하며, 빈곤 상태의 사회심리적 상태 및 그들의 정치사회적 소통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듯하다. 학술적 관행과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규범에 매몰된 커뮤니케이션 양식과 목표라는 이념적 토대는 박탈된 이들의 정치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실제 자체가 열등하거나 아예 정치적 소통 양식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렇기에 빈곤한 이들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우리의 지적 폭력에 의해 소멸되거나 타락한 것으로 그 의미가 퇴행적으로 구성된다. 이는 결국 그들의 경제적 결핍이 사회적 박탈 상태로 이어지게 하며 사회적 '소외'를 실현시키며 영속화하는데 기여하는 효과를 낳는다. 어느 계층, 어느 개인이든지 그들만의 정신적, 물질적 토양과 분리시킬 수 없는 고유한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그것들의 정치문화적 영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교훈을 무시하지 않는다면(Rancière, 2012; Thompson, 1966), 우리는 좀 더 진지하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이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부의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는 경제적 비민주화가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적어도 언론학이 민주주의에 여전히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현실과 연구의 비대칭적인 경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도대체 불평등에 대한 이해 없는 정

치적 자유와 평등이 어떻게 기획 가능한가?

이 논문은 이러한 우리 나라의 언론학 연구의 빈곤에 대한 인식과 개념의 관념성을 비판하고 학술적 실천을 탐색하기 위하여 첫째, 한국 사회에서의 경제적 불평등의 양상과 특성을 파악하고 둘째, 빈곤에 처한 개인과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고, 셋째, 언론학이 분석하고 이해하는 빈곤의 정치커뮤니케이션 과정과 목표의 문제들 및 연구 방식의 한계를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빈곤과 불평등의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실천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2.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의 특성

언론학 연구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 사회의 불평등 어떠한 상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논의를 통해 경제적 결핍을 낳는 불평등 조건들이 언론학 연구의 연구 내용과 조사 설계에서는 어떻게 반영 또는 반영되지 않는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은 PC통신에 이어 인터넷으로 이어지는 소위 뉴미디어 시대와 시기적으로 동일한 궤적에 있어 왔다. 사회의 미디어화와 경제의 불평등화가 병렬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다. 실제로 불평등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연구들이 일관되게 지적하는 것은 한국의 불평등은 90년대에 들어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90년대 후반, 구체적으로는 96~98년 큰 폭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이성균·신희주·김창환, 2020).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96년에서 97년으로 넘어가면서 급격히 상승하고 그 추세가 이어져 왔다는 것인데, 90년대 시작된 소득불평등의 증가는 90년대 후반 급증하면서 IMF 시기를 거치는 과정

에서 총체적 불평등 상태인 다중격차 현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데 이 다중격차는 통상적 빈곤 상태와 달리 매우 문제적인데, 불평등 상태가 단순히 소득의 불평등에 머물지 않고 중첩적이어서 물질적 빈곤이 다른 삶의 측면들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연동되는 상태이다. 다중격차는 소득, 자산, 주거, 교육 등 두 개 이상의 개인의 생활 조건들의 불평등이 체계적으로 결핍 상태에 이르게 하며 소통 등 다른 모든 삶의 방식을 이전과 결별시키고 제한한다(진병유·신지옥, 2016).

다중격차는 90년대 이후 급격히 심화되기 시작한 전통적인 부의 낙수효과와 약화, 노동 불안정성의 심화, 신자유주의적 복지 정책 등으로 인한 소득의 불안정성과 더불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지난 2-30년간 가장의 임금에 의존한 가구 소득의 감소와 노동 불안정성의 증대, 강제 이사와 퇴거, 개인과 가족의 건강과 관련한 사건들, 자신과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시간과 물질적 재투자의 난감함, 더 강한 재난의 여파 등으로 삶이 와해되는 계층이 확대되어 왔다. 다중격차는 삶의 총체적 결핍 상태인 동시에 미래의 결핍 상태까지 예보하는 결핍의 영속화를 예정한다는 점에서 훨씬 비판적인 상태이다. 자산과 주거의 불평등이 동반되기에 다중격차의 문제는 가족내 특정 개인의 결핍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빈곤 상태를 전이시키고 결핍을 공유하게 하며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시간과 물질적 투자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한다. 즉, 가족 구성원 모두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물질적 토대를 전면적으로 불안정하며 해체시키는 계기들이 다중격차에 의해 확산되어 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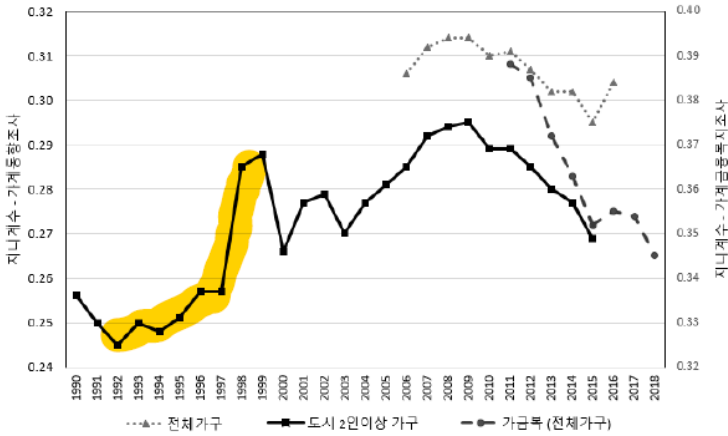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의 소득 불평등(지니계수) 변화

출처: 이성균·신희주·김창환, 2020 p. 64

전병유와 신지옥(2016)은 다중격차에 대한 정부의 문제 해결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불평등 구조의 해소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아직도 정부 복지정책은 전통적인 4인 가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다차원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적 불평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임금노동자들 중에서도 남성 가장의 고용안정을 우선 도모하고 (고용보험법제) 여성노동자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의 복지제도로 인해 전체 가구 소득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만 가구를 구성하는 비가장 개별 노동자들의 열악한 임금 구조는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다. 다중격차속에서 빈곤 정책은 기존의 관행적인 자원 배분 방식으로 인해 가구 구성원 개인들의 빈곤과 결핍 상태를 외면하며 복지 정책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결핍은 개별적으로 보편화되고 각자의 삶의 총체적인 상태를 다중적으로 빈곤하게 만들고 있지만 실제 대안은 전통적 가부장적 가구를 우선 고려하는 비현실적이며 파편적인 경향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빈곤과 관련한 불평등 양상의 또 다른 특성은 소득 불평등 현상들이 하위 수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위 계층에서 확대되어 올라오는 불평등의 양상은 매우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역동적인 불평등이라고 불릴만한 이러한 빈곤 양상은 시의 적절한 정책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구인회(2019)에 의하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90년대와 달리 더이상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고 저임금근로자 비율도 OECD 최상위 수준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별화된 불평등은 전체 가구 수준에서는 은폐되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즉, 가구 수준에서는 소득 불평등성이 OECD 국가중에서 중위권에 위치하지만 개인 소득의 불평등 수준은 OECD 국가중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불평등 수준이 과거의 집단적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으로 전이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가구 수준에서 경제적 차별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 계층연령층의 불평등성도 심화되고 있는데,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에 사는 인구가 지난 20년 사이에 7.6%에서 17.7% 급증하면서 지니계수 역시 0.279→0.363으로 악화되고 노인 계층의 소득 불평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욱 심화되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빈곤율 역시 마찬가지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자영업의 증가는 그대로 빈곤 가정의 확대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이다. 또한, 직업이 아닌 직종내 불평등 역시 심화되고 있는데, 같은 직종내에서도 (예를 들면 제조업) 고용 형태 (정규/비정규)와 사업체 규모 (영세/소/중/대)에 따른 임금 격차 역시 확대되면서 직업이나 직종이 더 이상 경제적 수준의 차이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되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불평등의 양상의 다차원적 '진화'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차이를 파악하려는 우리의 접근방식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인 가구의 증가 등 최근 들어 변화하고 있는 가구 구성은 새로운 불평등과 빈곤의 요인이 되고 있다(김창민·김은경·신광영, 2020). 경제적 불평등은 크게 임금(wage), 근로소득(earnings)과 가구소득(income)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임금과 근로소득에 의한 불평등은 신자유주의적 노동 환경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불평등 요소는 가구소득의 불평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최근들어 한국 사회에서 가구형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구원 수, 부부의 총교육연수와 총노동시간 등이 가구의 중사상 지위나 직업에 비해 가구소득 불평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가구 소득을 넘어 가구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빈곤 상태와 불평등 조건을 논의하는데 더 중요해 지고 있다. 가구의 속성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요소는 특히 중간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분배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구주 특성 변화도 불평등과 빈곤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적 가구를 벗어난 1인 또는 2인 청년 세대로 구성된 가구의 빈곤율 역시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 관계의 변화와 가구 구성의 변화에 따른 불평등의 증가는 기존의 전통적 가구, 직업, 성, 연령을 기준으로 한 불평등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며 다층적이며 이전과는 다른 면밀한 접근을 요구하게 한다.

이러한 다층적이고 다층적인 소득 불균형에 따른 빈곤층의 확대와 계층간 또는 동일한 계층내 불평등의 강화로 인해 각종 복지정책은 부의 재분배를 통한 빈곤 탈출이 아니라 단순히 빈곤 악화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양한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개인과 집단의 소득 불평등만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이어서 이들이 빈곤한 상태로부터의 벗어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빈곤에 대한 몰이해와 왜곡된 오해속에서 빈곤의 현실 자체가 우리로부터 숨겨져 있어 빈곤의 첫 경험은 영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구인회(2019)가 보기에는 오늘날 한국 사회는 “시민 대다수가 원하는 위기 극복의 선택을 가능

하게 하는 정치적 수단을 갖추고 있는가...기존 지배질서에서 소외되어온 모든 세력에게 참여를 개방한 포용적 정치체제의 존재”(p.256-266)의 부재함이 심화되는 상황이어서 다중적이고 다층적 불평등 상황은 쉽게 개선되기 힘들어 보인다.

한국사회의 부의 불평등한 재분배의 또 다른 특성중 하나는 기존의 지위 표시가(예를 들면 인구사회학적 변인들) 개인과 집단의 사회경제적인 역량의 지표로서 효용성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다는 측정의 오류성과 관련된다. 예를 들면, 조귀동(2020)은 90년대생이 경험한 불평등의 현상을 사회문화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90년대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고도화되기 시작한 시기로 한국 사회에서 90년대생은 출생 당시부터 불평등이 예외 상황이 아닌 보편 상황으로 경험한 세대가 되는 셈이다. 그에 의하면, 오늘날 사회는 이전 세대의 열등한 사회적 지위 표시가 더 이상 개인의 능력에 의해 극복되지 못하고 한국적 불평등 구조와 문화에 의해 이전되고 세습되는 불평등 상태의 영속화를 구조화한다. 기존 세대에서는 대학졸업자가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의 삶보다 더 나은 경제 및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게 해 주는 지위 표시가 되었기에 그/ 그녀의 학력 수준은 해당 개인의 사회경제 및 문화적 우열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었으나, 오늘날은 단순히 대졸자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 포함되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는지, 그 외의 ‘지방’ 대학을 졸업하였는지 등의 대학간 ‘서열’에 의해 사회적 지위가 표명된다. 이는 기존의 단순 교육 수준을 측정하는 지위 표시가 서열 지위라고 할 만한 불평등한 사회문화적 구조로 대체되고 고착화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당연히 공교육이 민간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정부의 교육 정책 역시 이러한 서열화한 지위 표시를 재생산하고 구조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양경은, 2016)<sup>1)</sup>. 즉,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전

---

1)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민간에서 38.4%에 해당하는 공교육비를 부담하고

통적 지위 표시가 아니라 서열 표시에 의해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위치가 좌우되는 ‘봉건적’ 시대로 퇴화하는 듯이 보인다. 이제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의 교육 수준이 아닌 사회적으로 규정된 학력 수준에 따라 개인과 집단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향유하는지 정해지는 - 포스트 모더니 아닌 - 레트로그적 전근대의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직업에 있어서도 숙련의 양극화로 인해 특정 분야와 특정 기업에 더 높은 부가가치와 노동가치가 집중되고 있어서 직업이 무엇이냐 보다 이제는 어느 회사, 어디에 있는 회사, 어떠한 직무를 하는지가 더 중요한 지위 지표가 되었다. 실제로 특정 업종과 기업에 집중되는 ‘일자리 병목현상’은 이러한 내부 경쟁에 의한 불평등 구조의 분화를 상징하고 있다(임운택, 2020).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중산층이 단순히 “중간 소득 집단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정된 도시의 중간계급과 도시 및 농촌의 프티부르주아 중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단 그리고 소득이 높은 상층 노동계급을 포함하는 집단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좀 더 상층의 집단”(조귀동, 2020, p. 9)이 되었다.

중첩적 성격의 계층 지도속에서 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쉽게 포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 사회의 중첩적이며 다층적 불평등 구조는 90년대생에게 익숙하며, 이들의 때론 모순적이며 반응적인(reactory) 정치사회적 행위로 전이되어 나타난다(전혜원, 2020)<sup>2)</sup>. 이처럼 평등의 구

---

정부는 약 61.6%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담하고 있는데 민간 부담액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양경은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부모의 지위가 학생의 성적과 관련한 세가지 복지체제 유형중에서 미국과 유사한 자유주의적 복지체제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간 재원의 투자 여력이 큰 부모들 내부의 경쟁도 강화시켜 부의 단순 세습이 아니라 특정 계층과 집단의 세습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즉, 세습계층내 분화된 세습 경쟁은 사회적 학력 서열을 분화시키면서 불평등 구조내 불평등을 심화 시킨다. 교육 자본 투자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부모들의 자유로운 경쟁상황에서 서열 지위가 강화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정형화된 단순한 불평등 구조를 반영하는 지위 지표에서는 포착되기 어려울 수 있다. 피케티(2020)의 자본주의 불평등 논의 역시 이러한 맥락에 위치해 있는데, 미국의 불평등성이 서방국가에서도 예외적으로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상위 소득 10%에 집중되는 자산, 교육, 사회적 자본의 재생산 구조속에서 밝히며 하위 90%가 이 구조속에서 지속적으로 불평등의 상태에 갇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조가 다중적, 다층적, 그리고 내부에서 더욱 분화되면서 우리사회는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차이와 그에 따른 사회문화적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들을 새롭게 재구성해야할 필요가 증대해 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점증하는 또 다른 불평등 현상의 특성중 하나는 소득 '구조'에서의 불평등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전병유·신지욱, 2016).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닌데, 토마 피케티에 의하면(Piketty, 2000) 90년대 후반에 시작된 소득 불평등의 구조가 2000년 중반에 이르면 확연히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주요 선진국의 소득에서 임금소득대비 자산의 비율, 특히 피케티 비율이라고 하는 비금융 자산의 비율이 2000년대 중반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기존의 임금소득을 기준으로 형성된 상위, 중위, 하위 소득간 불평등의 구조의 성격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사회 불평등 구조의 양상이 전통적 의미에서 개인과 가구의 안정적 임금소득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크기 차이로 전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2>를 보면, 90년대 들어서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노동과 임금 정책은 국민들의 임금 소득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는데, 90년대 중반 급격히 하락하였다가 2000년대 들어서 각종 복지정책의 확대로 잠시 상승하는 듯하였으나 하락 추세는 계속 이어지

---

2) 시사In의 전혜원 기자는 이 기사에서 최근 조직화되고 있는 일련의 정치적 집단행위에 내재된 윤리적 성격을 탐구하고 있다. 공정(Fairness)은 정의로움을 결정하는 진보적 가치의 성격을 가지는데,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공정을 핵심 가치로 집단적인 정치적 참여가 빈번히 발생한다. 인천공항 정규직화, 공공의료 반대 의료 파업, 서울시 산하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대에 이 세대는 조직적 반대를 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반신자유주의적 노동 정책은 불공정하다는 이유이다. 이것이 정치적, 윤리적 정당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적 전통에 의하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정치적 대화와 참여를 통해 정의를 내세운 민주적 정치행위를 하는 것으로 포장될 수 있는 이들의 '정의'적 집단행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 것인지 종종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한다. 이는 속의를 통한 민주주의적 실천이라고 분명히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속의를 통한 불평등의 반민주주의 실천인가? 혹은 이것이 속의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인가? 우리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모델들은 이처럼 민감하며 미묘한 정치적 갈등 양상을 묘사하고 원인들을 포착해 내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개인과 가구의 소득에서 임금인 아닌 금융이나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소득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90년대 후반에는 오히려 임금 수익률을 초월하게 된다. 노동의 대가로 버는 소득의 증가는 갈수록 저평가되고 있지만, 즉, 착취적이 되어가고 있지만, 비노동적 자본 증식의 경제적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 임금 소득의 상대적 하락으로 인해 개인이 더 많은 노동을 하거나 두 개 이상의 직장을 갖거나 또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은 근면한 가족이 아니라 구조가 만들어 놓은 빈곤의 함정에 떨어지지 않기 위한 힘겨운 몸부림이다. 이는 가구 소득을 빈곤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지만 개별 가족 모두를 빈곤 상태로 만들며 금융과 부동산 등 자산소득자와 비교하여 박탈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이성균,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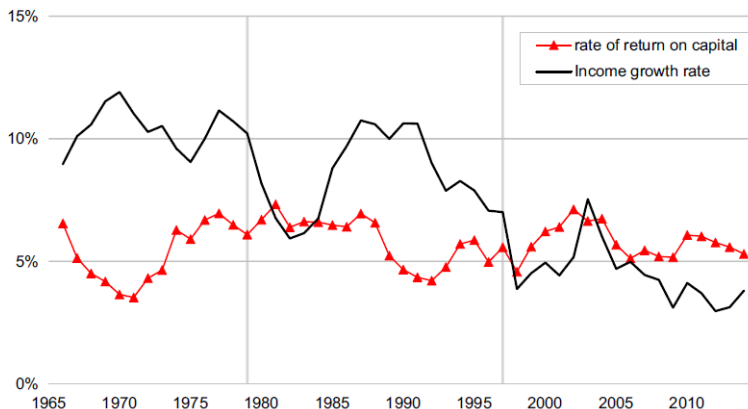


그림 2. 1966-2014 한국의 자본수익률과 임금소득증가율 추이

출처: Lee & Yoon, 2017, p. 694

이미 많은 가구는 가족 구성원 중 일부의 임금 소득의 유입이 중단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빈곤해지는 빈곤경계 상태에 놓여져 있다. 노동이 생

활을 지배하는 이들과 비노동으로 실업과 구직 상태에 있는 이들은 삶의 곤궁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자산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들의 숫자와 그 가족들의 소득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sup>3)</sup>. 임금의 특성은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흘러 나가는 유량적(flow) 소득인 반면 자산은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저량(stock)의 특성을 지닌다. 물가 상승률과 주택 가격의 상승 등을 감안한 실질 임금이 고정 또는 하락하는 추세에서 저량 소득인 자산은 안정적으로 상승하면서 개인이나 가구의 자산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삶의 환경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다(이우진, 2018). 얼마를 버는 지보다 어떻게 버는 지에 따라서 사회경제적 조건과 더불어 사회심리적 상태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1인 가구의 소득 규모가 같다고 가정하면 임금 소득자와 자산 소득자의 삶의 질은 매우 클 것이다. 그런데, 원래 자산소득은 상속 및 증여나 자본이득에 의해 재생산되고 축적되기 때문에 임금 소득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는 특성이 있는데다가 부동산과 금융 자산 소득자의 수와 소득 규모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뚜렷하다. 게다가 지난 2015년 이후 급증한 전세자금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 중산층의 자산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 속도와 정도는 더 빠르게 악화된다고 할 수 있다(김남근, 2020). 이러한 상대적 자산 소득자의 증가와 자산 빈곤자의 증가로 인해 중-부정적 사회심리적 상태 역시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빈곤 의식도 비례하여 확산되

---

3) 이를 버킷 엘리베이트 효과(Butterwegg, 2009)라고 하는데, 버킷 엘리베이터는 곡물과 같은 벌크 재료를 담은 양동이(버킷)이 계속해서 퍼담아 수직으로 운반하는 운송 메카니즘이다. 곡물이 오르고 내리는 연속적 이동 양태가 마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을 경험하는 사람과 하락을 경험하는 사람이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서로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와 유사하다고 하여 붙여진 개념이다. 오늘날 소득, 자산, 주거, 교육면에서 증척된 약자들은 버킷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맥없이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는 미디어에서도 쉽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의 은유가 될 수도 있다. 축적되지 않는 자산과 증가하지 않는 임금 소득에 간혀 있지만 결핍과 배제도 없으며 풍요와 소비가 편하게 공유되는 미디어 속 이미지를 이들은 맥없이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

고 있다. 임금 소득은 개인과 가족 구성원의 신체와 정신 그리고 시간의 지속적 소모가 동반되어야 하기에 이러한 소득 구조의 불평등 심화 현상은 단순히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을 넘어서 개인/집단적 사회심리 상태를 박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는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경제학 분야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경향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는 90년대 후반부터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불평등의 양상들이 매우 빨리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불평등과 빈곤의 대상과 집단 역시 분화되고 규모와 질에 있어서도 악화되고 있다. 90년 중반까지 지배적이던 사회경제적 구분 - 임금, 직업, 계층, 가구 등 - 은 체계적으로 재조직되어 그 양상이 변화해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불평등한 개인과 가구, 계층의 특성도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불평등과 빈곤이 다층적 그리고 다층적으로 분화되면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불평등의 부정적 추이에 대해 피상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어 왔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조건과 그로인한 구체적인 차이와 차별 및 불평등의 양태와 정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대적 복지 국가 상태를 가정하고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불평등이 발생하는 삶의 측면이 중첩적이어서 특정한 결핍 상태는 해당 주체의 삶의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불평등의 양상이 다층적으로 분화되고 있어 기존의 개인과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지위 지표로는 포착이 쉽게 되지 못하는 상황을 시급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역동적으로 심화되는 불평등 양상들의 전개 과정에서 우리는 개인들의 사회심리적 박탈감과 소외감의 특성 역시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개인과 집단의 소통 동기, 목적, 방식, 내용, 그리고 양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3. 경제적 불평등과 커뮤니케이션 환경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이 장에서는 언론학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해 일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논의들의 특성들을 검토하기 위해, 심화되는 불평등과 빈곤의 상황에 처한 개인과 가족들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불평등의 사회경제적 양상과 불평등의 문화적 양상은 언론학이 불평등 조건에서 어떠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위한 분석틀을 제공해 줄 것이다.

언론학은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한 특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모델을 기획함으로써 정치학이나 사회학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정치사회적 관념을 구성한다. 즉, 언론학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는 방법적 논의가 정치적 이상과 윤리를 구성하는 핵심 논리라는 위상을 갖는다. 잘 알려져 있듯이, 언론학, 특히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하버마스의 공론장론과 커뮤니케이션 행위론의 결합에 기초하여 이를 이론적, 방법론적 근거로 삼고, 언론을 중심에 두고 사적 그리고 공적 공론 공간을 이상적으로 조직하며 공론장 참여자로 하여금 이성적 합의의 언어 사용과 소통 행위를 실행할 것을 단정적으로 요구한다(Dryzek, 2000; McLeod · Kosicki · McLeod, 2009; Scheufele, 2000). 이는 언론학 연구를 주도하는 미국 주류학계의 학문적 믿음의 기초인 동시에 정치 사회의 바람직한 규범적 틀인데, 흥미롭게도 한국 언론학 역시 이러한 믿음의 구조를 무차별적으로 내재화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숙의 과정 자체가 어떤 바람직한 정치적 현실을 구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라면 숙의 과정에 내재한 커뮤니케이션의 개방성, 비강압성, 그리고 합리성 등과 같은 이념 또는 이상성들이 현실적인 대화와 토론, 그리고 논쟁 속에 구현되어야 한다(이준웅 · 김은미 · 문태준, 2005, 35쪽).



이러한 속의 과정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어떤 바람직한 정치적 현실”을 구성하는 전제이자 수단이라는 믿음은, “개방성”, “비강압성”, 그리고 “합리성”이라는 규범적 가치와 척도와 결합됨으로써 하나의 신념적 성격을 지니는데, 언론학에서는 이것이 헤게모니적 이념과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한다. 헤게모니적인 이념은 도전이나 갈등의 상태에서 해방된 신념 체계로서 지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일상의 규범화된 코드로 존재한다(Kellner, 2003). 실제 한국 언론학 연구의 두드러진 경향중 하나는 중심이론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단순히 학문적 완성도의 결여라는 의미보다 더 미묘한 사회문화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김춘식, 양승찬, 이강형, 황용석(2005)은 한국 언론학 연구의 경향중 하나가 많은 경우 중심 이론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평가가 아닌데, 이들 연구들은 속의적 과정이 민주주의의 전제이자 수단이라는 담론으로 연구의 중심 이론을 대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비평이다. 즉, 한국 언론학 연구들은 중심이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언론학 연구자들의 관념화된 신념에 의해 이론적 논의 자체를 소멸시킴으로써 중심이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거나 중심이론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언론학 연구자들이 속의 과정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정치사회적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헤게모니적으로 스스로 내재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이론적 신념체계는 맹목적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나름의 메커니즘에 의해 객관적으로 규정되고 과학적으로 증명됨으로써 스스로의 권위를 구축한다. 연구 문제와 설계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개방성, 비강압성, 그리고 합리성이라는 규범적 가치 또는 이와 유사한 하위 개념들은 그러한 언론학의 커뮤니케이션적 헤게모니 상태를 유지하고 공고하게 하는 윤리적 잣대가 되며 언론과 정치학자의 공고한 정치적 가치 구조를 구성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 신념은 사회적으로 당연한 규범으로 확정되고 더 나아가 일반 시민의 커뮤니케

이션 실천 행위의 규범으로 정착되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지배 의도를 지닌 헤게모니 성격도 가진다.

공적 속의의 진정한 의미는 ...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적 이성의 공적 활용과 관련된 문제이며, 또한 인간의 존재 양식 및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심원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박승관, 2000, 189쪽)

박승관(2000)은 속의 민주주의 담론이 구성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정확한 지적이다. 속의적 과정에 대한 이러한 정당화 논리 속에서 개방성, 비강압성, 합리성은 민주적 시민의 자적인 동시에 비민주적 시민이 결여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배적 가치라는 정치사회적 규범 인식에 기초하며 이를 보편화한다. 이 논리의 구성적 특성은 커뮤니케이션 규범의 위계적인 차원을 조직하며, 동시에 (당연하게) 참여하지 못하거나 강압적 그리고 감정적인 상태의 주체들이 행하는 커뮤니케이션 상태는 회피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처럼 언론학의 이론적 토대와 연구로서 속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내재화된 관념들은 단순히 학술적 차원을 넘어 사회일반의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행위의 규범으로 요청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속의적 가치와 규범이 즉, 언론학의 지배적인 정치사회적 신념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 무차별적인 이러한 특정 신념 체계가 현실적 실천 조건에서도 정의로운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규범은 그 자체로 보편적 실천 윤리의 성격을 부여 받는다. 규범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들이 예외 없이 준수할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상태를 가정하기에, 규범이 갖는 비(非)법적 통제권력의 정당성은 당연히 검토되고 질문되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 사회는 9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사회적 불평등성의 급진적

확산이라는 변화의 과정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속의적 규범이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빈곤과 결핍의 삶의 상태에 있는 주체들에게는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를 평가해 보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필요한 작업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불평등의 조건에 처해 있는 개인과 가구들은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놓여 있으며 일상적으로 이를 어떻게 스스로 체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사회학자인 아네트 라루(Lareau, 2012)의 <불평등한 어린 시절>은 커뮤니케이션과 직접적 관련성을 갖는 연구는 아니지만, 빈곤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한 흥미로운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녀의 연구는 집과 일터 그리고 학교 등 다양한 생활 공간에서 서로 상이한 계층들의 삶과 가족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놓여져 있는 가족들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특징적인 현상도 더불어 목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동자 계층과 빈곤층 아이들의 하루는 중산층 및 중상류층 아이들의 하루에 비해 “느린 속도로 그리고 정형화되지 않은 형태”로 흘러가 버리는 반면 텔레비전과 게임 등 미디어 소비량은 상위 계층의 아이들 보다 훨씬 많다. 이에 따라 이들의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지적 자극이 매우 드물며 부모와 자녀간 대화도 교육적이지도 않고 그 대화 방식에 있어서는 상호적이지 못하여 애초에 의미 있는 사회적 지식과 경험의 축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즉,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빈곤층 가족의 구성원들은 일상에서 친밀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요구와 권리를 요구하고 추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거나 낯설게 느끼며 더 나아가 기관이나 조직에서 그러한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고립적이며 원초적 상태의 커뮤니케이션 문화에 익숙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산층 부모 사이에서 당연시하는 자녀 교육에 대한 ‘의무감’도 빈곤

층 및 노동자 계층 부모에게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중산층 아이들은 어른의 관심을 자신의 당연한 권리라고 느끼는 반면 빈곤층 및 노동자 계층 아이들은 그런 것을 당연한 권리로 주장하지 못한다(ibid, p. 146)

빈곤층 가정의 아이들은 조직적인 규칙에 따라 행동하거나 누군가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데도 익숙하지 않았다(ibid, p. 150)

리처드 세넷(Sennett, 2003)에 의하면, 인성(character) 형성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인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특정한 내용으로 조직되어 인성의 특성과 형성과정에 따라서 개인의 사회정치적 참여의 동기와 기회의 소유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오늘날 사회의 지배적인 인성 형성 방식에는 세가지가 있는데, 첫째, 자신 스스로가 능력과 기능을 개발하는 ‘자기 개발’, 둘째, 스스로에 대한 인식과 존중감 형성을 위한 ‘자기에 대한 돌봄’ 그리고 셋째,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무언가를 되돌려’ 주는 방식들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성 형성 방식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 있지 않다. 아네트 라루가 보여주고 있는 빈곤층 개인들은 더 넓은 세계에 관여할 수 있는 인성 형성 방식들과 그러한 인성 형성 기회의 필요성을 체화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경험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는데, 자기개발, 자기돌봄, 그리고 타인에 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개인의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인성 형성 방식을 아예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기술과 지식 그리고 체계 및 그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개성은 구조화된 경제적 결핍 상태와 착취적 노동 상태, 그리고 가학적인 관계에서 그 어떤 자리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개인과 가구의 계층적인 사회적 지위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인

성 형성 기회는 체계적으로 배제된다. 오히려 이들은 배려없으며 지적이지 못한 자극적 문화적 아버투스안에 거주하는 퇴행적 인성을 소유한 계층으로 인식되고 이들의 고유한 집단적 문화로 낙인된다(Royce, 2009).

바로 이점이 세넷(Sennett, 2003)이 진정 강조하는 것인데, 지배적인 사회적 인성의 성격과 형성 방식은 그 자체로 불평등에 처한 이들에게는 매우 차별적인 방식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의지, 자신에 대한 사랑, 자신의 희생은 흠잡을 데 없이 그 자체로 도덕적이지만 곤궁에 처한 이들에게는 매우 낮은 성격이며 그들 공동체 내부의 생존을 위한 사회적 규범으로도 적절하지 않기에 이들에게 이러한 흠잡을 데 없는 인성을 요구하는 것은 폭력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바람직하다고 우리가 인식하는 특정한 가치와 규범은 보편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의 개인과 공동체에게는 폭력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무지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이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조차 무지한 상태에 있다. 사실, 우리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극복되기 힘들기에 우리는 이 사실 - 우리 외의 타자의 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을 선협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이기에 우리 언론학을 포함한 사회적 인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들은 사회에서 선호되고 바람직하다고 통용되는 규범과 행위들을 소외된 개인과 집단에 계몽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사회적 개입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적 결핍 상태를 완화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공공적 시도에는 사회적 편견과 정치적 폭력의 성격을 일부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회적 개입 노력은 대부분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빈곤층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한 계몽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공적 개입은 통상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문화적 훈련”에 기초하여 “표준적인 양육 전략”을 수행하기 때문이다(Lareau, 2012, p.480). 중산층과 그 이상의 계층의 문화적 훈련과 표준적인 양육 전략에 비추면, 빈곤층의 문화적 아버투스 그

들의 소외된 사회적 지위를 영속화하게 하는 퇴행적 자본의 성격으로 간주된다. 우리가 무지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구조적으로 박탈된 커뮤니케이션은 중산층과 그 이상의 계층의 커뮤니케이션 아비투스<sup>4)</sup>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며, 빈곤층 가정과 개인에게 내재되고 축적되는 그들만의 문화적 훈련과 표준적인 양육 전략은<sup>4)</sup> 오로지 소멸되어야 하는 반문화적 훈련과 비표준적인 양육 전략으로 인식된다. 구조대신 규범으로 계층적 불평등과 빈곤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극복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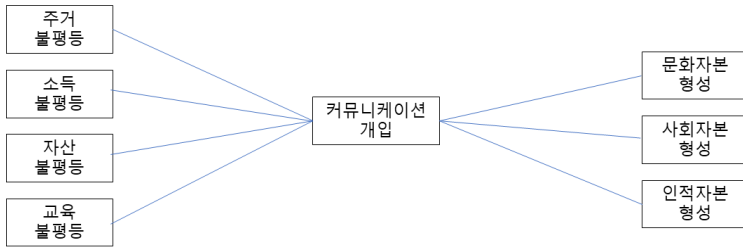


그림 3.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개입에 대한 지배적 모델

4) 독일어 관계는 Beziehungen 인데, 이를 비타민 B로 칭하기도 한다. 이는 모든 개인과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관계는 결핍된 상태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아네트 라루는 빈곤층 아이들 사이에서는 부모의 부재속에서 주어진 엄청나게 많은 그들만의 시간을 “자유롭고 즉흥적인 놀이”로 채우는 일이 빈번함을 발견한다. “어느 날 오후, 티렉과 친구들은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 옆에 둘러 앉아 있었다. 소년들은 머리를 맞대고 뭔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었다”(p.137)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이러한 놀이를 통해 티렉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관리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자신들을 책임지는 방법을 배운다...사회적 경쟁력을 학습하는지 잘 보여준다”(p.147). 이와 달리 중산층 자녀들은 부모들이 번갈아 가며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일상을 점검하고 조직하려 개입하며 아이들의 관계를 정형화 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적 훈련과 지식의 축적이 부모에게서 아이들에게로 자연스럽게 전이된다. 이러한 상반된 계층간 커뮤니케이션 하비투스의 차이는 분명히 계층간 불평등 구조를 영속화시키겠지만, 빈곤층 자녀들의 자유롭고 즉흥적이며 친구들과의 자율적인 놀이 관계가 열등하거나 퇴행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내용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사회의 빈곤층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특수한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하비투스에 대해 무지하거나 외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내용과 방식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즉,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비타민만을 처방하며 그들이 가진 항체는 무시한다는 것이다.

위의 <그림 3>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회적 개입 모델인데, 특정한 사회 구조적 성격의 문제 (다중격차)가 우리가 선호하고 채택하는 커뮤니케이션 규범과 방식으로 (미디어 기술과 이용 액세스) 기대하는 산출물 (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에 의해 완화 또는 해소될 것이라는 믿음이 반영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의 옳고 그름 이전에 이러한 접근에 내재된 우리의 관념의 성격이다. 이 모델은 분명히 중산층 이상의 문화적 훈련과 표준적인 양육에 기초한 커뮤니케이션 자원의 분배 모델로 불평등에 대해 무지하거나 빈곤문화에 대한 편견이 투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과연 불평등에 처한 이들에게 이러한 개입은 항상 정당한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아마티야 센(Amartya Sen, 2013)은 지배적 계층의 시각에서 요구되는 자원의 재분배는 소외계층의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종종 자기 비하나 동료 공동체 구성원간의 유대 상실을 요구하는 지식과 의식의 개발을 강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주류 사회와 국가의 빈곤 개선 프로그램들은 거의 대부분이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대신 빈곤에 처한 개인과 공동체가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체화하면서 그 구조속으로 들어갈 것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실제 비참한 3세계에 대한 1세계의 공적 지원 프로그램들은 서방 세계의 시장과 대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 언론 모델에서 한치의 벗어남이 없이 설계되고 수행되는데, 이는 체계적인 불평등의 영속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

세넷과 센이 공통으로 문제시하는 것은 불평등의 해악을 인지하고 완화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적 개입은 결코 평등하지 않은 “이해 (understanding)”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개입을 통해 자본의 종류와 크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믿음도 빈곤과 불평등의 상태에 감금되어 있는 이들에 대한 평등한 이해가 아닌 지배적 계층들이 믿고 있는 신념과 윤리적 규범에 기초한 위계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헤게모니적인 속의적 규범을 내재화시

키러는 체계적 시도들도 그러한 불평등한 이해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보다 먼저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과 빈곤의 커뮤니케이션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미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빈곤 상황이 더 이상 예외적 상태가 아니라 보편적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면, 조정진(2020)의 <임계장 이야기>는 빈곤이 지배하는 현대 노동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데, 노동 환경이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직접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근본적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 ◆ (고속버스) 배차 계장으로 일하는 동안 한 달에 두세 번 쉬면서 하루 10시간씩 근무했다. 화장실도 참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했다. 근무하는 동안은 어디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본 적도 없었다. (41쪽)
- ◆ 경비원 징계의 이유 (일부 발췌)(113~114쪽)
  - 민원이 생기면 무조건 경비원 책임이다. 바로 관둬야 한다.
  - 근무시간에 휴대폰을 보려거든 관둬라
  - 윗사람 말에 토를 달려거든 관둬라
  - 주민들의 징계 요청이 있는 자
  - 허기없이 불온문서를 게시 배포하는 행위를 한 자
  - 업무와 관련된 기밀을 누설한 자
  - 사회적·도덕적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한 자
- ◆ 나는 (공기업에서) 38년 직장 생활을 통해 조직과 상사에 충성을 다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이었다. 퇴직후 경비원을 시작하고 제일 처음 한 일이 스마트폰을 없애고 통화만 가능한 핸드폰으로 바꾼 것이었다. 경비 업무를 소홀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서였다. (246쪽)
- ◆ 고령자는 한 번 들어오면 나가라고 할 때까지 충직하게 일한다. 그래서 고용주들은 까칠한 젊은이보다 고분고분한 노인들을 선호한다. 또한 젊은 이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꾼다. 젊으니까 이를 수 없는 꿈일지라도 소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노인들은 그런 헛된 꿈을 꾸지 않는다. 고령층은 늙은 소처럼 아무 불평이 없다. (250쪽)



노인 인구의 증가는 심화되는 불평등 사회 구조에서 특수한 노동 소외 현상을 보편화시키고 있는데, 위의 사례는 이들의 커뮤니케이션 환경도 매우 황폐화된 상태임을 보여준다. 억압적인 노동 조건은 한 개인이 다른 개인과의 관계 맺기를 체계적으로 박탈하고 자신 이외의 모두에게 종속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사회적 개입과 참여의 기회도 불온하고 지탄 받는 행위로 규정화되어 사전에 차단당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점증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뮤니케이션 빈곤 및 불평등과 직결되어 있으며 정치 정보의 습득과 공유 및 참여도 제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방식은 매우 억압적이고 폭력적이어서 오로지 “늙은 소”의 인성 형성과 “불평 없는” 커뮤니케이션만이 허용될 따름이다.

이처럼 불평등한 노동 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 환경은 기존의 불평등과 빈곤을 영속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조직되는데, 개인은 이 조건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있어 어떠한 권한도 갖지 못한다.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동기와 수단 및 기대 효과가 우리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커뮤니케이션 소외로 이어지며 이 결과는 정치사회적 공감, 효능, 그리고 참여를 선택이 아닌 배제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숙의적 커뮤니케이션 규범에 대한 견고한 신념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비판의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불평등 구조의 심화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불평등화는 비단 노인 세대에만 한정된 것이 결코 아닌데,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알바 노동이라고 불리는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청년 노동에서도 이는 다시 확인이 된다(이광석, 2017, 178쪽).

관찰자: (매장) 안쪽 주방이 궁금한 게, 알바생들이 들어가서 음료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주방 안이 잘 안보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휴대폰 쓰고 그래요?

C씨: 네. 직원들 밖에 있고 그럴 땐 그 안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저도 안에서 근무하는 날에는 휴대폰 진짜 많이 쓰는 편이에요. 밖에서 일할 때 직원들이 다 밖에 있을 때는 휴대폰 만지지도 못해요.

관찰자: 그러니까 그 안에 있을수록 핸드폰 사용할 수 있는? ...

C씨: 네 핸드폰 계속 사용하고, 직원분들 없을 때는 상시적으로 사용해요. 저도 평균적으로 한 시간 정도 사용하는데, 안쪽에서 일할 때는 더 많이 사용해요.

관찰자: 그러면 안쪽에는 카메라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C씨: 네. 안쪽에는 카메라가 없어요.

관찰자: 그걸로 주의를 하거나 그래요? 안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터치가 안 되겠네요? 근데 점장, 시니어, 주니어 (매니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C씨: 네. 그래서 눈치보고 (사용하고 그러죠).

위의 참여 관찰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 세대의 SNS 등 미디어 환경은 세밀하게 통제된 노동 환경과 밀접히 연동되어 개인들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불평등한 상태에 놓이게 한다. 특히, 뉴미디어 플랫폼들은 노동중에는 감시와 통제 수단으로, 한정적인 비노동의 시간에는 집중적인 휴식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이 개인의 지적 또는 문화적 동기에 의해 형성되거나 정치사회적으로 전용될 수 없는 조건이다. “그렇기에 주로 비정규 직종에서 일하는 알바 청년들에게 스마트폰은 점점 더 온라인 청년 ‘잉여’력의 수취나 감정노동의 강화를 위한 ‘유리감옥’으로 탈바꿈 중인 것으로 보인다”(ibid, 180쪽). 조정진(2020)과 이광석(2017)이 제시하는 사례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불평등한 노동과 커뮤니케이션 조건에서 존중받고 존중하는 노동과 커뮤니케

이선은 오직 소수에게만 허용된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이다.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지식과 정서적 상태가 일터와 쉼터에서 박탈되며 일상에서 소외되는 환경에서 우리는 어떠한 참여적 정치사회와 숙의적 커뮤니케이션을 기획하고 있는가?

이 사례들에서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는 연령과 직종 및 미디어 등 소통 방식이 상이할지라도 커뮤니케이션 조건과 동기가 주체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해 보인다. 직종과 세대의 차이는 적어도 커뮤니케이션 불평등성에서는 드러나지 않으며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된다. 오늘날 사회의 불평등화가 경제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불평등하게 조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훈육의 양육 방식이든지 또는 커뮤니케이션학이 주장하듯 개방적, 비강압적, 그리고 합리적인 커뮤니케이션 규범은 가혹하리만치 비참함을 외면하는 차가운 냉정이자 폭력으로 비취질 수도 있어 보인다.

사회적 불평등화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가 불평등한 조건에 순응하는 방식을 체득하게 한다. 사람은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을 때보다 타인이 나의 그러한 상태를 아는 순간 또는 나 자신이 불평등한 조건에 어쩔 수 없이 감금되어 있다는 자괴감을 타인이 인지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은 물질적 빈곤에서 정신적 빈곤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예를 들면, 집단과 공동체내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자신의 소득 순위는 절대적 소득보다 정신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열등하고 그것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개인의 심리는 그들의 복종과 종속적인 몸짓과 언어로 드러난다. 이는 개인의 심리와 행동이 “자신”의 것에서 “타자의 시선 속”에서 결정되는 소외적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진정 그들의 동기인지 그 동기에서 성취하는 것이 진정한 충족의 상태인지 알기조차도 어렵다(Bauman, 2019; Bourdieu, 2000; Desmond, 2016).

그런데 이러한 불평등과 빈곤의 심리 및 정서의 소외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윌킨슨과 피케트(Wilkinson & Pickett, 2019)는 경제적 불평등 조건이 심화될수록 사회적 위계는 더욱 심화되며 열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경향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의하면, 사회적 위계화가 심화될수록 개인들은 그러한 사회의 불평등화에 더욱 민감해 지는데, 우월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자각하도록 이끌고 “불평등이 지배행동체계를 더 강력히 유발하는 지배와 종속의 문제를 고착”시키게 된다(ibid, p.90). 열등한 개인과 우월한 타인과의 비교와 평가가 일상화되고 불평등한 커뮤니케이션 관계와 과정보다 자의와 타의에 의해 제도와 심리적 구조안에서 위계적으로 조직되며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평등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지위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낮고 호혜와 신뢰,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더 많이 참여하므로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양호” 하게 나타나는(p.91) 반면 불평등이 더 높은 사회에서는 “빈자와 부자 모두 이웃과 노인, 이민자, 환자나 장애인을 도우려는 의지가 약하다”(p.101)는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소득불평등이 적은 평등한 국가일수록 지역공동체,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사회참여 가능성도 증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Lancee & Van de Werfhorst, 2012). 즉, 사회경제적 조건의 상태에 따라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에도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사회적 불평등성의 정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타자에 대한 심리, 관계의 성격, 그리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지와 참여의 정도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면서 - 즉, 개인과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상태와 환경에 영향을 주면서 - 개인과 공동체의 성격도 변화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열 체계는 근본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정치적 장치의 성격을 가진다. 자원이 무한정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열 체계에 따라

자원의 종류와 양이 분배되는데, 이 때 서열 체계는 평등한 분배를 위한 체계가 될 수도 또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하지만) 불평등한 분배를 위한 체계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결정은 파레토 법칙이 아니라 정치적 신념에 의해 좌우된다. 불평등 사회의 확산은 분배를 서열에 비례하는 원칙안에 고정시키며, 사회적으로 낮은 서열 지위에 처한 이들로 하여금 종속적이고 의존적 커뮤니케이션 상태를 감내하게 하고 서열의 상위에 있는 개인과 집단으로 하여금 지배 심리와 행동을 내재화하게 함으로써 더욱 불평등 구조를 고착화 시키는 과정인 것이다. 아울러 사회가 불평등한 분배를 위해 개인과 공동체를 서열화 시킬 경우 사회적 개입의 성격과 방식 역시 위축 또는 소극적이 되거나 개인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불평등의 사회 심리적 연구와 참여 방식 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불평등 사회에서 불평등에 반응하고 적응하는 불평등의 심리와 그러한 환경에서 조직되는 커뮤니케이션 환경 및 커뮤니케이션 실천들의 특성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 4. 언론학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네가지 접근 방식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양상과 이것이 개인과 사회적 차원에 미치는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커뮤니케이션 양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그림 4>와 같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커뮤니케이션 양태에 대한 네가지 경우의 논의 방식을 추출해 보았다. 이 유형화는 이 연구의 목적인 한국의 언론학 연구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를 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일반화하기 위해 방법론적 수단을 갖고자 구성하였다. 유형화에 기초한 경향성 파악은 사회의 불평등 문제와 같이 복잡한 사회적 현상들을 단순화시킴으로써 그 현상들간의 상이함이 차이들로 가시적으로 드

러나게 해 주며 전반적인 현상들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분석적 도구이기 때문에(Lehnert, 2007) 이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4.** 언론학 연구의 불평등에 대한 네가지 유형

〈그림 4〉 유형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형화를 위한 두 개의 속성들로 불평등 구조를 세로축에 그리고 가로축에는 불평등의 대상을 위치시켰다. 세로축인 “불평등 구조”축은 불평등의 종류, 원인과 해법과 관련하여 이 문제들을 개인과 특정 집단의 개별적 성격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경제적 부의 상태를 결정짓는 구조속에서 논의하는 정도이다. 가로축인 “불평등 대상”은 불평등을 인식하는 관점의 위치를 의미하는데 결핍된 것의 규정, 결핍의 원인, 그리고 해법 등이 불평등 당사자의 관점과 경험에 기초하는지 아니면 외부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지를 드러낸다. 즉, 가로축은 불평등을 바라보는 각 연구자의 시선의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난과 결핍을 서술하는 저자(author)는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빈곤을 묘사하는 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빈곤의 문제의 성격이 좌우된다(조문영, 2019). 불평등을 경험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이들의 사회심리적 상태는 물질적 결핍만큼이

나 빈곤한 사람들의 태도와 행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빈곤을 누가 어떠한 시선으로 연구하거나 보도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언론학이 불평등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빈곤의 원인(세로축)에 대한 관점과 아울러 누구의 시선(가로축) 반영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4〉의 유형 I/ II에서 보이는 “타자”는 불평등에 처해 있는 개인과 공동체 일반의 시선을 의미하며 반대로 유형 III/ IV의 “동일자”는 그러한 빈곤에 속해 있지 않지만 빈곤한 자들을 외부자의 시선으로, 정확히는 빈곤한 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서있다고 인식하는 시선을 의미한다. 랑시에르(Rancière, 2013)와 레비나스(Levinas, 2003)적 의미로 “동일자”는 언제나 발화가 가능한 자이며 목소리를 통해 자신 뿐 아니라 타자를 규정하는 담론 주체 일반을 일컫는다. 동일자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으며 타자와의 자리를 바꾸지 않는 한 그 서열적 위계는 영속화된다. 동일자에 의해 사회의 불평등의 종류와 대상 및 해법은 기존 사회 일반의 인식 지평위에서 동일자의 시선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의 맥락에서 동일자는 언론학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언론학자의 지위를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각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Type I〉은 윤리적 유형인데, 빈곤의 당사자(타자)입장에서 그들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궤적, 측면 등을 사회경제적 구조 속에서 맥락화하는 언론학 연구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빈곤층의 커뮤니케이션 특성과 의미 생성 과정을 그들의 관점과 시각에서 이해하고자 기존의 빈곤과 관련한 관념적, 차별적, 도구적 접근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타자의 시선과 타자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무시하지 않으며 빈곤층 고유의 커뮤니케이션 행위 방식과 신념에 기초하여 정치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ype II〉 도구적 유형의 언론학 연구들은, 타자의 입장에서 결핍의

대상과 내용 및 방식을 이해한다는 점에서는 윤리적 유형과 유사하지만 그것의 원인 또는 해법에 대한 이해와 제시에 있어서는 비본질적인 것 또는 비물질적인 관념에 기초하여 개인적 차원의 인식과 행위를 수정하여 결핍된 것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다. 도구적 유형에 속한 연구들은 불평등의 해소는 사회적 불평등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단순히 속도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빈곤의 확산을 유보시키는 등 사회적 안정을 위한 수단화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달라지는 것은 개인의 빈곤 상태이지만 구조적 차원의 변화는 없으며 사회적 차원에서 타자의 불평등 구조는 영속화 된다. 다만 타자의 관점에서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환기된다는 측면에서 빈곤 문화와 관련한 담론 차원에서는 불평등성이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

〈Type III〉는 관념적 유형인데, 이 연구들은 주류적 시각을 반영하거나 타자의 그것에 무지한 상태에서 불평등에 처한 개인과 공동체 및 불평등의 원인과 해법 등을 연구자의 관점에서 규정하고 불평등에 처한 개인과 공동체들에게 적용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다. 비록 이 연구들은 불평등의 원인을 사회경제적 구조 차원에서 논의하고 법, 제도 및 교육 등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지만 불평등에 처한 이들이 아닌 엘리트적 관점을 투영한다. 일시적이고 부분적 불평등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도구적 유형과 유사하지만 엘리트주의적 관념에서 불평등의 원인과 해법을 구성하기에 불평등에 처한 타자의 목소리와 관점은 배제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 결과 이 연구들은 기존의 주류 사회의 경제 및 문화정치적 질서와 규범과 가치를 확대 재생산하여 그것들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한다. 이 과정에서 동일자(연구자)의 사회적 지위와 권위도 지속되는 효과를 갖는다.

〈Type IV〉 차별적 유형은 본질적으로 불평등의 해소나 완화보다 동일자의 정치경제적 이익과 기존의 사회문화적 서열 지위를 유지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불평등의 대상과 원인 및 해법을 제시하려는 연구들을 포함한다. 불평등의 심화를 야기하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논의보다 불평등



에 처한 개인과 공동체의 사적이거나 주변적 요인들에서 불평등의 원인을 찾고자 한다. 또한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논의도 개인적 차원의 인식이나 행위를 개선시킴으로서 가능하다고 믿으며 연구자의 관점에서 불평등에 처한 개인이나 집단의 인식과 행위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불평등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이해하는 방식이 주류 사회의 그것을 반영하고 있어 불평등의 해소는 결국 불평등 구조와 담론의 재생산과 심화로 이어지게 한다. 이런 점에서 차별적 유형은 불평등의 심화를 통해 사회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는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네가지 연구 유형들은 특정한 언론학 연구가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연구 문제를 설정하며 의미를 도출시키는 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모든 유형화 작업이 그러하지만 유형화를 위한 단순화 과정에 의해 연구의 복잡하고 미묘한 차이들이 간과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유형화는 기존 연구들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러한 추출형 유형화(extracted type)들은 이론과 개념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상적 유형화(ideal type)보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불평등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경향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5. 불평등 사회에서의 언론학 연구 경향

미디어화와 사회의 불평등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언론학의 숙의적 규범은 과연 어떠한 사회문화적 함의를 갖는지 평가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필요한 작업이다. 언론학 연구의 중심적 테제라고 할 수 있는 숙의적 가치와 규범이 즉, 언론학의 지배적인 정치사회적 신념은 불평등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 것일까? 무차별적

이라고 할만한 언론학의 신념과 그에 기초한 규범적 가치들은 불평등의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며 어떠한 사회를 구성하고자 하고, 이러한 시도들이 오늘날 불평등 사회에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조직하게 하는데 어떠한 기여 또는 방해물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최근 언론학이 불평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는지 주요 연구들을 중심으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먼저, 언론학이 주요하게 고려하는 결핍의 대상은 무엇인가? 기존 연구들은 언론학이 “미디어 결핍”(media deprivation, 강진숙, 2002; 김승수, 2016; 김은미·정화음, 2007; 이숙정·백선기·한은경, 2013; 이호규, 2009; 황승연·윤영민, 1998)과 “참여적 결핍”(participatory deprivation, 김춘식·양승찬·이강형·황용석, 2005; 박진수·이민영, 2019; 안수찬·민혜영·장바울·박재영, 2015; 양승찬·이미나·신지희, 2019; 이나연, 2017; 천혜선·박남수·이현주, 2014; 최선영·고은지, 2019)이 이야기하는 불평등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영향들에 주요한 관심을 표명해 왔다. 미디어 결핍 연구는 미디어가 생산하고 유통하며 미디어 이용자들이 향유하는 정보와 기술, 그리고 최근에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주목하며 이러한 미디어의 불균등한 배분에 의해 발생하는 불평등이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며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미디어 결핍 연구들은 미디어 기술과 정보 및 이용의 불균등한 배분 상태가 기존의 경제적 요인 (경제자본)과 문화적 요인 (문화자본) 그리고 사회적 요인(사회적 자본)의 크기와 질의 차이에 의해 매체 보유 및 접근, 인터넷 및 정보 이용 실태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이러한 자본의 다양한 결핍 구조를 확대시키는 순환적 결핍 상태를 야기한다고 이해한다(강진숙, 2002; 황승연·윤영민, 1998). 이는 근본적으로 정보불평등은 임금이나 소득, 자산과 같은 자본적 자원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언론학에서 정보와 미디어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불평등의 상태를 “매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보생산과 전송 및 수용 단계에서, 이용자들의 사회문화적 상태에 따라 미디어 자원의 불평등한 배분과 그 이용 효과 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이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다. 교육 수준과 직업 및 가구소득 등의 차이가 미디어 접근과 이용 및 효과에 있어서의 불평등의 차이를 심화시키는 논의들은 미디어 접근과 이용의 개선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이 언론학 연구들이 인식하는 미디어 결핍은 경제론자들의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론과는 다른 ‘자원의 불평등한 매개론’이라고 불릴만한 고유의 불평등 논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적 결핍은 미디어적 자원의 불평등한 재분배 상태가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참여의 불균등한 배분으로 나타나는지를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최선영·고은지(2019)의 언론학 논문에 대한 토픽모델링에 의한 메타분석은 90년대 후반,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언론학 연구들은 미디어 이용자들의 제도적 또는 비제도적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인터넷을 비롯한 뉴미디어 기술의 급진적 확산은 참여적 결핍에 대한 연구를 폭넓게 자극하고 있다. 사회의 미디어화가 진행됨에 따라 언론학 연구도 정치의 미디어화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러한 경향성을 반영하고 강화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연구의 중심 테마는 통상 다음과 같은 행위와 행위의 동기 및 영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온라인에서 정치적 참여 활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댓글을 통해 지지의사를 밝히는 댓글쓰기는 공개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온라인 정치참여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메시지를 퍼나르거나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적극적인 관여적 이용을 통해 정치적 참여가 이뤄지기도 한다. 페이스북에서 이용자들은 ‘좋아요’를 클릭함으로써 태도를 드러내고, 댓글을 달거나 메시지를 공유하는 적극적인 미디어 이용 형태를 보이며 이러한 적극적인 미디어 이용이 정치

지식의 습득과 정치적 태도 변화로 이어진다고 보았다(양승찬·이미나·신지희, 2019, 60~61쪽).

이러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정치적 동기 및 효과 연구는 속의 민주주의와 담론 정치에 참여하는 적극적 시민의 규범에 대한 강고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젠더 등 지위 지표들에 의한 참여의 불평등은 정치적 과정에서의 소외 문제를 발생시키며 배제하는 정치 구조를 재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참여적 결핍은 미디어 접근과 이용이 주요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결핍과 참여적 결핍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학 연구에서 불평등은 결핍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이 무엇이나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미디어 자원의 불평등한 재분배와 그것의 재생산 과정이라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구조속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 언론학 연구들은 결핍의 대상으로 미디어를 포함한 전반적인 미디어 이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한 증대하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들은 미디어 결핍이 포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다층적 커뮤니케이션 - 예를 들면, 대화, 네트워크, 관계 - 이 개인 또는 집단에 어떻게 상이하게 분배되어 있으며 이것이 참여적 행위와 의도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탐구하고 있다(예를 들면, 금희조·조재호, 2015; 민영, 2019; 이숙정·육은희, 2014).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결핍” 역시 기존의 경제적 불평등이 포착하지 못하는 언론학의 불평등과 관련한 논의의 기여라고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결핍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은 기존 연구들이 불평등의 구조속에서 미디어와 정치 결핍을 파악하고자 하지만 결핍의 대상인 “타자”들의 다중적이며 다층적인 빈곤 “현실”을 축소시키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제공해 준다는 데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 제기로서 불평등에 의한 빈곤층의 확산 과정은 물질적 결

핍을 넘어서 커뮤니케이션 기회, 역량, 그리고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이 연구들이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사회경제학 논의에서는 부차적이거나 그다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 결핍에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처럼 언론학 연구는 불평등에 처한 개인과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환경 논의와 정치사회적 함의를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결핍적 특성으로 전환시키면서 이에 대한 특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담론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언론학 연구는 다중적이고 다층적 결핍 상태에 처한 개인과 가정 및 공동의 커뮤니케이션 불평등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진지한 접근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사실, 불평등에 처한 개인, 가정, 집단들이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개인적 또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가 매개하는 온라인 대화와 직접적 대면 대화 등은 일상의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을 대표하고 있지만 그것은 형식적일 뿐, 실제 계층별로 대화의 내용과 목적은 개인과 공동체의 문화적 하비투스에 내재되어 있고 그 코드들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 결핍을 고려한 연구들은 소외되고 결핍된 개인과 공동체들의 미디어와 대화, 네트워크의 고유한 특성을 거의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부재속에서도 우리는 개인과 집단의 지위 지표 차이에 따른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이 매개하는 참여 결핍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의 대다수는 실제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결핍된 커뮤니케이션 맥락을 배제한 분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금희조와 조재호(2015)<sup>5)</sup>에서 일부 발췌한 다음의 연구 가설은

---

5) 이들의 연구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언론학 연구들의 일반적 경향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례로 인용한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이 연구는 예외성의 사례가 아니라 언론학 연구의 일반적 내용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고려하여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참여적 결핍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 가설 2-1:** 오프라인의 네트워크 사이즈, 이질성, 대화 빈도는 정치 지식, 효능감, 참여와 정적 관련성을 보일 것이다.

**연구 가설 2-2:** 소셜미디어상의 네트워크 사이즈, 이질성, 대화 빈도는 정치 지식, 효능감, 참여와 정적 관련성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가설 설정의 배경에는 연구자들의 주관적인 견해가 전제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상의 대화는 “질적 수준이 진정한 대화라고 보기 어렵고 매우 제한적이며 일련의 독백과 비슷한 단편적 내용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정치적 대화가 심도 있는 지식을 증진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가치를 공유하고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공동의 참여활동을 조직화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다. 소셜미디어와 관련하여 정보를 소비하는 행위 중심의 소극적 이용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대화에 참여하는 이용의 효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461쪽)는 것이다. 이는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이지만 언론학의 보편적 신념을 반영하고 있는데, 모종의 “질적 수준”을 감안한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방식이 있으며 “소극적 이용”과 대조되는 “적극적 이용”이 기대되는 “지식”, “가치”, 그리고 “효능감”을 형성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실천 과정은 당연히 숙의민주주의적 규범, 보편적 시민의 정치 참여의 의무와 이성적 개인의 참여 방식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명제들의 진위를 떠나서 이 명제들의 전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명제들이 전제하는 규범적 미디어와 커뮤니케이

---

과 연구 설계 방식을 잘 드러내고 있는 주류적 연구 사례의 하나이다.

선 이용과 환경은 소외된 노동과 삶을 살아가는 개인과 집단의 커뮤니케이션 이용과 환경에 대해 어떠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적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불평등의 커뮤니케이션이 조직하는 소통의 의미와 참여의 방식은 소외된 이들의 선택이 아님에도 이 연구들은 암묵적으로 개인적 선호도의 문제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확인한 한국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불평등의 이면에는 임금장(조귀동, 2020)과 청년 알바생의 노동 환경(이광석, 2017), 봉건화하고 있는 계층의 세습 구조(조정진, 2020), 그리고 사회안에 머물고 싶지만 사회밖으로 내몰리는 빈곤한 사람들(조문영, 2019)의 억압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문화가 만연해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는 이러한 불평등화가 다중적이고 다층적으로 진행되면서 불평등의 순환 고리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양경은, 2016; 이우진, 2018; Lee & Yoon, 2017).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와 욕망을 소진시키는 미디어와 정보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속의적 규범과 참여적 가치와 행위의 그림자가 아니라 이들의 내밀한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내용 및 방식에 대한 이해, 그 과정에서 이들이 생성하고 공유하며 확정하는 지식의 특수성에 기초한 그들 고유의 정치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맥락적 이해가 없이 사회경제적 소외 계층이 정치적 뉴스와 정보에 ‘노출’도 적으며 ‘주목’도 덜 한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기에(연구자들이 기대하는) 미디어가 제한되어 있고 이들이 어떤 까닭에 지적 관여도가 낮다고 하는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통계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집단이 더 많이 사회정치적 정보와 뉴스에 노출되어 있고 지적으로도 더 높은 사회정치적 관여도를 보인다는 해석도, 사실은, 이들이 그러한 사회정치적 혹은 물질적 필요와 관계를 자극하는 그들 고유의 노동의 성격과 그들 증산층 또는 그 이상의 계층 유지의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일 수 있

다. 그들이 단순히 ‘민주적 시민’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열등 계층이 이용하고 인식하는 정치적 뉴스와 정보는 ‘시민적 소양’ 형성에 유해하다는 추정 또한 이런 연구들에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언론학의 빈번한 분석 모델과 그 해석에서 탈 맥락적인 엘리트주의와 중산층 규범에 의해 왜곡된, 계급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시민적 관여와 정치적 태도 및 관심 등을 고려하는 ‘수용자를 중심으로 한 문제’는 연구에서 주변화 되어 있고(김춘식 등, 2005; 안수찬 등, 2015), 이들 연구에서 소외된 계층이나 개인들의 정치적 태도와 정치 관여에 대해서는 아예 학문적 연구문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분석을 위한 측정 도구에서 이러한 탈맥락적 연구 경향은 구체적인 형상을 보인다. 예를 들면, 정치참여를 측정함에 있어서 빈곤층의 정치적 소외 구조를 감안하지 않고 선거투표, 정당, 정치인과의 소통, 선거캠페인 참여, 정치적 단체 활동, 배지 또는 티셔츠 착용 등으로 측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당과 정치활동은 대중적 정당 구조도 아닐 뿐 아니라 소외계층은 더욱 기존 정치 체계와 활동에서 배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과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이들의 정치 참여를 중산층과 그 이상의 계층을 고려한 측정 도구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과학적인 것을 떠나서 윤리적인 것인지 의문이다.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정치사회의 규범으로 배제된 자들의 정치사회를 측정하는 모순된 방식이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사용되는 것은 논쟁적이어 되어야하지 않을까? 어둠을 개선하지 않고 눈을 어둠에 맞추는 양상. 즉,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연구 문제의 전체와 정책적 대안에 있어서도 모두 이와 같다.

아래 <표 1>은 언론학 연구에서 정치 참여 외에 주요하게 활용되는 주요 변인들의 개념과 측정 도구들이다. 이 도구들은 모두 미디어와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이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정치 과정은 정치적 의도와 욕구의 성취 능력의 기대정도로, 정치 참여는 제도적, 비제도적, 그리고 최근에는 담론적 정치화 과정 개입 여부와 관련하여,



그리고 최근에는 개인의 관계와 대화에서 사회 및 정치적 관련성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하버마스적 커뮤니케이션 실천과 공론장론을 토대로 한 서구 근대의 자유주의적 숙의민주주의 정치사회의 이상을 언론학제적으로 체화한 결과이다(Dryzeck, 2000). 이 도구들을 이용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직관적 그리고 통계적 타당도가 예외없이 적정 수준을 충족시키고 있기에 미디어와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결핍의 유무와 그 영향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는 불평등 구조에 의해 빈곤한 그리고 빈곤해지는 그리고 결코 빈곤에서 벗어 날 수 없는 이들의 “맥락적 타당성”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통계적 타당성이 맥락적 타당성을 대체하고 과학적 분석이 윤리적 분석을 배제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인성 - 공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추구하며 사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개입과 참여를 실현하는 민주적 시민의 인성 - 을 전제로 하지만 그러한 인성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한 맥락적 이해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상태이다. 기존의 사회학 연구들은(Bourdieu, 2000; Desmond, 2016; Lehnert, 2007)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치와 사회는 그들의 소외 상태를 일상적으로 확인 시켜 주는 배제의 장(Sphere of rejection)일 뿐임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불평등에 처한 빈곤한 이들의 사적 영역은 학대적인 만큼 통제된 노동의 시간들과 그것이라도 영위하려는 과정에서 축적되는 걱정과 분노, 또는 무기력함이 예외적이 아닌 보편적 커뮤니케이션 상태일 수 있지만, 주류 언론학 연구는 이러한 열패적 심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보인다. 노동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이들은 통제된 자유 시간에 “식견을 갖춘 시민의 양성”이 될만한 뉴스와 정보 및 지식을 탐구할 여지와 여유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고려가 되지 않는다.

표 1. 언론학 연구 모델들의 주요 정치 커뮤니케이션 변인

변인	정의	측정도구
미디어 이용	정치관련 미디어 이용	정치면, 경제면, 국제면/ 뉴스를 각각 얼마나 자주 시청/ 정치 시사, '경제', '국제 이슈 각 세 분야에 관한 뉴스나 정보 습득을 위해 언론사 웹사이트 혹은 포털·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정치사사', '경제', '국제 이슈 각각에 관한 뉴스, 정보 또는 다른 이용자의 의견
정치 지식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	10개의 질문은 한국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현재 여당, 국무총리, 경제 부총리, 국민의 4대 의무 등 기초지식을 묻는 5문제와 최근 항명파문으로 사표가 처리된 직급, 담배 값 상승, 중앙은행이 통화를 공급하는 통화정책, 파리테러 대상의 프랑스 언론사,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미국 행정부, UN안보리의 권한 등
효능감	정치 효능감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정치에 대해 이해하고 그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정도	'나는 정치에 참여할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치적인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 만큼 공적인 일을 잘 할 자신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 종종 자신이 없다'(역코딩), '나는 정치가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정치 참여	정치과정 혹은 사회 이슈에 관련된 의견 표현 및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라인 참여는 지난 1년간 '정당활동', '정치인과의소통', '선거캠페인활동', '서명운동', '인권운동', '사회이슈관련운동', '환경운동', '정치적목적으로 티셔츠, 배지 착용'</li> <li>- 웹사이트 참여와 관련해서는 '정부기관웹사이트', '사회활동을 하는그룹이나 조직의 웹사이트', '정치인웹사이트',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각각 웹사이트를 얼마나 자주 방문해서 활동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웹사이트상의 '청원, 탄원, 진정'과 '여론조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8개의 항목으로 평균</li> <li>- 소셜미디어 참여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소통', '언론인과의 소통', '정치, 사회 이슈에 관한 소통', '정당 혹은 정치인 팔로우', '정치적 그룹이나 선거 캠페인활동', '정치 사회적 활동 관련 집회참여에 대한 글을 홍보 또는 태그하거나 포스팅', '정치적, 윤리적, 환경적 메시지를 담은상품을 홍보 또는 태그하거나 포스팅'</li> </ul>
네트 워크	이용자의 관계망	관계망의 사이즈, 이질성, 대화 빈도 "귀하가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서 정치/시사/경제/국제 이슈에 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정도입니까" 이질성은 "직접 만나 정치/시사/경제/국제 이슈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연령', '교육수준', '수입 혹은 경제수준', '정치적 성향', '정당 혹은 정치인 선호도'의 5가지 측면에서 얼마나 이질적인지 10점 척도 상 질문
오프 라인 대화	직접 커뮤니케이션	정치 시사 이슈에 관해 '가족 및 친지', '가까운 지인 및 친구', '직장동료, 클래스메이트 혹은 선후배' 각각과 얼마나 자주 대화하는지 10점 척도 상에서 질문
sns 대화	온라인 대화	소셜미디어상의 대화 빈도도 일관된 세 가지 항목과 함께 매체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SNS상에서 알게 된 사람' 항목 한 가지를 더 추가하여 각각의대상과 얼마나 자주 정치 시사 이슈에 관해 대화하는지 측정

이러한 참여적 숙의의 상태가 박탈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표 1>의 측정 도구들은 다소 당혹스러운 언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정치 시사 이슈에 관해 가족 및 친지나 가까운 지인 및 친구, 직장 동료, 클래스 메이트 혹은 선후배 각각과 얼마나 자주 대화하는지 10점 척도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과연 다중적이며 다층적으로 가난하고 가난해 지는 이들에게 어떠한 심리적 자극을 줄 것인가? 이 도구들은 우리가 신봉하는 - 동일자들의 이상의 실현을 추구하기 위한 - 공론장의 합리적 재구조화라는 명분에 기초한 이론적 토대가 엘리트들만의 동화(fairytale)로 보이게 만든다.<sup>6)</sup> 특정 계층에 있으면서 특정 신념을 가지고 숙의민주주의에 헌신할 수 있는 이들의 자유로운 신전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하게 추구되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는 순간은 당혹스러울 수 있다. 그 자체로 빈곤 상태로 진입할 것을 두려워하거나 빈곤 상태에 이미 진입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빈곤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인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렇기에 이들에게 없는 또는 어떤 이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거나 보여진 적이 없었던 이들에게 개방적이고 비억압적이며 합리적 커뮤니케이션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은 다소 폭력적일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빈곤의 현실에서 제시되는 탈맥락적인 이해와 대안은 연구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탈 현실적인 조사 과정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예외적인 연구도 있으나<sup>7)</sup> 주류 언론학 연구에서 진행

---

6) 이것이 엘리트주의적 동화(assimilation)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학술적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데, 언론학자와 기자들이 공유하는 규범들과 충돌하는 규범들에 대한 논의들이 그러하다. 이러한 연구들의 목적은 기존 공론장의 윤리적 가치와 전문적 주의의 규범의 실천을 강화하는 것인데, 흥미롭게도 불평등이 증가하는 2000년대 이후 이러한 연구들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언론과 언론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의 하락이라는 공동의 이해가 언론학과 언론 연계적 논의를 자극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둘은 모두 불평등의 사회경제적,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해서는 놀라우리만치 이해하려는 진지한 시도를 담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은 엘리트주의적 동화를 위한 헤게모니적인 지식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

하는 설문조사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개인들과 집단으로부터 안전하게 격리되어 있는데, 연구자들 대부분은 다중 격차와 다층 차별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격차와 차별의 공간은 거의 예외 없이 조사대행기관 또는 조사대행연구자들만이 돌아다닌다.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조사대행기관조차 그들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패널들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대리하는 연구 수행이 정상적 연구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은 기존의 인구나사회경제적 지위 지표들이 진화하며 확산되고 있는 불평등 구조를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게 하며 개인과 공동체내 존재하거나 부재한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방식을 지속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놓이게 한다. 우리의 연구 활동은 어쩌면 불평등한 커뮤니케이션 구조에 대한 무지의 순환구조를 만들게 하며, 불평등에 처한 빈곤한 개인과 집단들과 조우하지 않는 연구 과정은 정치사회적으로 탈맥락화 시키는 계기들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이러한 언론학의 탈맥락적 연구의 전통은 시민의 정치적 참여 기회 공간을 더욱 축소시키는데 기여해 왔을 수도 있다. 지난 2-30년간 지속적이며 일관된 변화중 하나는 소득불평등과 정치불평등의 지속적 확대임을 우리는 확인하였다. 이는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소득 불평등이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매우 밀접히 관계하며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양당 중심의 의회민주주의는 저소득 계층과 노동자 계급의 정치를 수렴하

---

7) 물론 모든 연구가 탈맥락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디든지 예외적인 사례는 있다. 예를 들면, 황승연·윤영민(1998)은 정보불평등의 구조와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식품업체부장, 지물포주인, 공장노동자, 주류업체차장 등 다양한 직종과 직업 종사자들의 매체 다이어리 방법을 통해 이들의 미디어 활용과 욕구의 맥락을 시간적 흐름속에 배치하였다. 민영(2019)은 노년층의 제도적, 비제도적 정치참여 그리고 참여를 어렵게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단순히 미디어 자원을 탐색하기보다 노인들의 신체적 상태와 심리적 동기과 동원연결망요인 등을 다각적으로 탐색하여 연구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사례의 발굴은 별도의 연구를 통해 그 내용과 함의를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Bonica et al., 2013).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2010년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소득 양극화는 계층별 투표율과 연동하여 고소득층은 투표할 확률이 상승하는 데 반해 저소득층은 그 반대로 움직여 왔는데 한국 사회에서 소득분포가 불평등할 때 투표참여의 격차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권혁용·한서빈, 2018). 이는 한국의 투표장에서 고소득층이 과대표 되고 저소득층은 과소대표 되고 있는 정치 구조가 투표라는 정치 참여에 의해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라는 차별적 조건도 영속화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 참여를 통해 불평등 구조와 비민주적 정치 시스템이 정상화된다는 것인데, 미디어를 통한 정치참여를 이상적 과정으로 전제하는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의 관점에서 이는 상당히 당황스러워해야 할 문제임에도 언론학 연구는 이에 대해 거의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채 정치 참여를 규정하고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투표 참여 자체에 계층 차별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울핑거와 로젠스톤(Wolfinger & Rosenstone, 1980)에 의하면 저소득층은 매일 매일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차적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반면 고소득층은 직업적 특성상 정치적 참여와 관심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며, 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문화와 성격과도 매우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기에 그러한 정치 사회적 관심은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의 문제이다. 그리고 고소득층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그들 고유의 정치 규범과 덕목에 대한 특수한 의견을 가지고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논쟁적인 방식으로 사회에 개입하며 제도적, 비제도적 정치 참여를 수행한다.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은 분명히 정치 시스템의 성격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의사 표현과 참여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적이 아닌 필수적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선거나 투표 또는 정치적 이익 단체와

정당 활동 등의 정치 참여는 이처럼 계층의 정치경제적 특수성을 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 결론 및 토의

우리는 이 논문을 통해 한국 언론학이 불평등과 빈곤에 대해 어떠한 고려를 하고 있으며 언론학 연구들이 갖는 경향은 어떠한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에서 확장되어온 불평등과 빈곤의 사회경제적 특성들을 살펴보고 불평등 조건에 처한 개인과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어떠한 결핍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사회심리 및 사회문화적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우리는 분석적 차원에서 한국 언론학이 불평등의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기 위해 어떠한 접근을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네가지 모델(<그림 4>)을 추출하였다.

한국의 사회경제적 불평등화는 미디어화와 시간적 궤적을 같이 하면서 진행되어 왔는데, 두 가지 사회 변화의 성격은 모두 속도와 침투 수준에서 급진적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화는 첫째, 소득 등 특정한 유형의 빈곤을 넘어서 주거, 교육, 자산 등의 결핍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다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불평등이 하위 계층에서 매우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역동적인 불평등이라고 불릴만한 이러한 빈곤 양상은, 셋째, 새로운 유형의 빈곤 계층과 가구, 집단을 형성하게 하고 있어 시의적절한 불평등 완화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기존의 지위 지표로 포착하기 힘든 새로운 서열 지표에 따라 심화되고 있으며 빈곤층과 불평등의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빈곤과 불평등에 처한 개인과 집단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많지 않으며 주로 사회학 등의 연구에서 이를 추론할 수

있었다. 빈곤층에 속한 이들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특성은 첫째, 계층적 혹은 계급적 차이를 보이며 중산층 또는 그 이상의 계층에 속한 개인과 집단이 인식하고 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양식과는 매우 상이하며, 둘째, 그러한 상이한 커뮤니케이션 양상은 개인적 선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빈곤과 불평등을 양산하는 구조에 의해 형성되고 있으며, 셋째,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커뮤니케이션 규범과 인성 형성 방식에 대해 빈곤과 불평등에 처한 이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문화는 열등하게 위치치워지며, 넷째, 계몽적이고 규범적인 “문화적 훈련”과 “양육 전략”을 수행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노동환경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빈곤만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적이고 황폐화된 커뮤니케이션 결핍까지 양산하고 있으며 여섯째, 이러한 퇴행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의해 그들의 사회 심리 및 행동도 변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한국 언론학은 다음과 같은 연구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전반적으로 언론학 연구들은 기존의 사회경제적 빈곤과 불평등 연구가 포착하고 이론화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 요소와 활동들이 갖는 의미와 영향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연구 영역으로 확립하여 확장해 오고 있다. 이는 언론학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이 기존의 사회경제적 논의 중심에서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사회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의미를 확장시켜주고 있다는 의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학은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뚜렷한 한계 역시 보여주고 있다. 분석에 의하면 한국 언론학은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네가지 유형 중에서 <Type III> “관념적 유형”에 다수의 연구가 분포되어 있다. 이 유형은 주류적 시각을 반영하면서 불평등에 처한 타자의 관점에 대해서는 무지 또는 배제하며 동일자의 관점에서 불평등의 대상, 원인과 해법 등을 제시하고 불평등의 문제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이다.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구조를 인지하고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이 문제

를 개선하고자 하지만 사회 주류적 관점과 이해 그리고 논의 과정 속에서 불평등의 문제의 해결은 당연히 일시적이며 표피적이고 제한적인 함의만 갖는다. 일시적이고 부분적 불평등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도구적 유형과 유사하지만 엘리트주의적 관념에서 불평등의 원인과 해법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타자의 목소리와 관점은 배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불평등의 해소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정치적 질서와 규범 및 가치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하며 이 과정에서 동일자의 사회적 지위와 권위만 지속되는 효과를 갖는다. 미디어, 참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결핍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논의의 확장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그 결핍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정치구조의 맥락과 더불어 “타자”의 맥락을 배제하여 결핍된 것의 본질적 성격과 고유의 특성에 대해서는 모호한 현실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탈맥락적 결핍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서 도출된 연구 결과와 함의는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될 수 있다. 즉, 지금까지의 주류 언론학 연구의 연구문제와 방법 그리고 결과에 대한 해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비현실적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기초한 연구 설계는 연구 결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왜곡시킬 가능성도 증가시키며 분석 결과의 원인을 잘못된 해석에 근거해 제시할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연구에서 맥락화된 연구의 발견과 더불어 기존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재검토하는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검토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김원영(2018)은 장애를 가진 이들이 처한 사회적 불평등과 편견은 이들을 빈곤의 상태로 이끌면서 물질과 신체의 난관에 더하여 “잘못된 삶(Wrongful life)”을 살고 있다는 인식을 낳게 한다고 한다. 무엇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를 불평등에 처한 이들은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신체와 규범과 물질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소외를 내재화한다는 것이다. 저지는 사회경제적으로 열등한 이들은 자기 인생을 자율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기회와 도구와 조건을 결핍하고 주류 사회가 그들을 “기호화”(43



쪽)하는 대로 존재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경향은 언론이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통제력”이 없으며 “나약한 정신상태”와 “개인의 도덕성”이 낮아 스스로 빈곤을 초래한 “자업자득”의 결과로 보도하는 데서 그대로 드러난다(Royce, 2009). 로이스(Royce, 2009)의 “빈곤 문화론”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특정한 문화적 패턴이 있다는 사회의 일반적 믿음을 의미하는데, 우리 언론학도 이러한 빈곤 문화 담론의 생산자일 가능성이 있다.

언론학이 생산하는 빈곤 문화론은 소비적이고 비정형화된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빈곤층 대신 시민적 정보와 뉴스를 취하고 소통하며 정치에 참여하는 선한 빈곤층이 우월하다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속의적 시민이 이상적 모델로서 문제시될 필요는 없지만 빈곤 문화론은 그 모델에 부합하지 못하는 이들을 발견하고, 문제시하며 계몽할 방식을 공식화하는 헤게모니적 담론의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많은 언론학 연구들은 이러한 억압적 헤게모니 논리로서 하버마스 공론장 논의를 연구의 핵심 이론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논쟁이 필요하다. 우리는 앞선 논의에서 오늘날 사회의 불평등화가 경제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불평등하게 조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이러한 헤게모니적 담론은 체계적인 불평등의 심화와 은혜를 조력하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모든 언론학이 빈곤 문화론의 공모자는 아니다. 사실, 언론학은 미디어와 정보 결핍에서 정치사회적 참여의 결핍에 이어 커뮤니케이션 결핍 등 점차 불평등과 빈곤의 주제를 확장하고 독자적인 맥락화를 시도해 오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언론학의 반 빈곤 문화론적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정리하며 그 의미와 전망을 체계적으로 논의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분명히 수행되어야 할 주제이며 비판적 언론학 연구 문제와 방법의 발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진숙 (2002). 인터넷 네트워크의 정보격차 현황과 대응정책 연구. <한국언론학보>, 46권 4호, 5-45.
- 권혁용·한서빈 (2018). 소득과 투표참여의 불평등: 한국사례연구, 2003-2014. <정부학연구>, 24권 2호. 61-84.
- 구인회 (2019). <21세기 한국의 불평등 : 급변하는 시장과 가족, 지체된 사회 정책>.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금희조·조재호 (2015). 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과 대화가 정치 지식, 효능감,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9(3), 452-481.
- 김남근 (2020). 자산불평등의 심화의 문제와 해소대책. <복지동향>, 257호, 5-11.
- 김승수 (2016). 미디어와 불평등의 변증법. <한국언론정보학보>, 80권, 7-39.
- 김원영 (2018).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서울: 사계절.
- 김예란 (2020). <마음의 말>. 서울: 컬처룩.
- 김은미·정화음 (2007).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격차에 관한 탐색. <언론정보연구>, 43권 2호, 125-161.
- 김창민·김은경·신광영 (2020). 가구구조와 소득불평등. <한국인구학>, 43권 1호, 31-59.
- 김춘식·양승찬·이강형·황용석 (2005).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동향과 쟁점 및 미래의 연구방향. <커뮤니케이션 이론>, 1권 1호, 126-162.
- 문상현 (2005). 글로벌 디지털 디바이드의 담론적 구성과 그 함의. <한국언론학보>, 49권 6호, 257-285.
- 민영 (2019). '시민'으로서 노인. <한국언론학보>, 63권 1호, 80-109.
- 박진수·이민영 (2019). 대학생들의 SNS 정치참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구: 도덕기반 신념의 조절적 역할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6권 2호, 5-41.
- 안수찬·민혜영·장바울·박재영 (2015). 한국 저널리즘 연구의 메타 분석. <한국언론학보>, 59권 6호, 246-280.

- 양경은 (2016).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복지체제론적 재조명. <비판사회정책>, 53권, 146-174.
- 양승찬·이미나·신지희 (2019). 뉴스미디어 이용과 인터넷토론효능감이 선거 과정 온라인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 이론>, 15권 1호, 57-90.
- 이강형·박중규 (2020).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뉴스 이용자들의 '뉴스 미디어 레퍼토리' 분류 및 효과. <한국언론정보학보>, 99권, 148-176.
- 이광석 (2017). 동시대 청년 알바노동의 테크노미디어적 재구성. <한국언론정보학보>, 83권, 157-185.
- 이나연 (2017). 미디어 이용에 따른 오정보(誤情報·misinformation) 습득이 정치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31권 6호, 118-151.
- 이성균 (2007).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복지제도의 불평등감소 효과.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317-1322.
- 이숙정·육은희 (2014). 디지털 활용 격차와 결과 격차. <한국언론학보>, 58권 5호, 206-232.
- 이숙정·백선기·한은경 (2013). 교육수준에 따른 정치참여 격차. <한국언론학보>, 57권 5호, 113-136.
- 이우진 (2018). 한국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현황과 과제. <정부학연구>, 24권 2호, 29-59.
- 이준웅·김은미·문태준 (2005). 속의 민주주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규제적 조건과 인터넷 토론의 양과 질. <한국언론학보>, 49권 1호, 29-56.
- 임운택 (2020). 사회의 재봉건화에 대한 진단과 세대 논쟁의 착종 : 조귀동. <세습 중산층 사회: 90년대생이 경험하는 불평등은 어떻게 다른가> (생각의힘, 2020). <경제와 사회>, 127호, 258-265.
- 이호규 (2009). 정보 격차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언론학보>, 53권 6호, 5-25.
- 전혜원 (2020.9.28). '공정'은 어떻게 그들의 무기가 되었다. <시사In>. Retrieved

from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03>

- 조귀동 (2020). 〈세습 중산층사회: 90년대생이 경험하는 불평등은 어떻게 다른가〉. 서울: 생각의 힘.
- 조문영 (2019). 〈우리는 가난을 어떻게 외면해 왔는가: 사회밖으로 내몰린 사람들을 위한 빈곤의 인류학〉. 서울: 21세기북스.
- 조정진 (2020). 〈임계장 이야기〉 서울: 후마니타스.
- 채영길 (2016). 부자 미디어, 가난한 계층: 한국 언론의 빈곤층에 대한 미디어 프레임.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5권 2호, 281-315.
- 천혜선 · 박남수 · 이현주 (2014). 다매체 뉴스이용과 사회적 네트워크 정치토론이 사회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8권 5호, 197-236.
- 최선영 · 고은지 (2019).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1960~2018 〈한국언론학보〉 논문 분석 : 다이내믹 토픽 모델링(Dynamic Topic Modeling)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3권 4호, 7-42.
- 탁장한 (2020). 보도된 쪽방촌과 보도되지 않는 쪽방촌: 탈식민주의적으로 빈곤의 공간 읽기. 〈언론과 사회〉, 28권 3호, 54-114.
- 황승연 · 윤영민 (1998). 정보불평등의 구조와 과정.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권, 46-84.
- Adams-Prassl, J. (2018). *Humans as a service*. 이영주(역) (2020). 〈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서울: 숨쉬는 책공장.
- Bauman, Z. (1998). *Work, consumerism, and the new poor*. 안규남(역). (2018). 〈왜 우리는 계속 가난한가〉. 서울: 동녘.
- Bonica, A., McCarty, N., Poole, K. T., & Rosenthal, H. (2013). "Why hasn't democracy slowed rising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7(3), 103-124.
- Bourdieu, P. (1993). *La misere du monde I*. 김주경 (역) (2000). 〈세계의 비참 I〉 서울: 동문선.

- Desmond, M. (2016). *Evicted: Poverty and profit in the American city*. 황성원 (역) (2016). <쫓겨난 사람들: 도시의 빈곤에 관한 생생한 기록>. 서울: 동녘.
- Dryzek, J. S. (2000).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 Liberals, critics, contestations*. Oxford Univ. Press.
- Kellner, D. (2003). *Media spectacle*. Routledge.
- Kim, Y. C. & Ball-Rokeach, S. J. (2006). Civic engagement from a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perspective. *Communication Theory*, 16(2). 173-197.
- Lancee, B. & Van de Werfhorst, H. G. (2012). Income inequality and participation: A comparison of 24 European countries. *Soc Sci Res*. 41(5). 1166-1678.
- Lareau, A. (2012). *Unequal childhoods: Class, race, and family life*. 박상은 (역) (2012). <불평등한 어린 시절: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불평등의 대물림>. 서울: 예코 리브르.
- Levinas, E. (1947). *De L'existence a L'existant*. 서동욱 (역). (2003).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울: 민음사.
- Lee, W. J. & Yoon, Y. H. (2017). Capital in South Korea: 1966-2014. *Social Choice and Welfare*. 49(3-4), 671-708.
- Lehnert, M. (2007) Typologies in social inquiry. In T. Gschwend & F. Schimmelfennig (eds.). *Research design in political science*. Palgrave Macmillan
- McLeod, D. M., Kosicki, G. M., & McLeod, J. M. (2009). Political communication effects. In J. Bryant, & M.B. Oliver (eds.). *Media effects*. (pp.228-251). Routledge.
- Piketty, T. (1997). *L'économie des inegalites*. 유명 (역) (2014). <불평등 경제>. 서울: 마로니에북스.
- Piketty, T. (2019). *Capital et idéologie* (2019년). 안준범 (역) (2020). <자본과 이데올로기>. 서울: 문학동네.

- Rancière, J. (2012). *Proletarian nights: The workers' dream in nineteenth-century France*. Verso.
- Rancière, J. (1990). *Aux bords du politique*. 양창렬(역). (2013).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서울: 길.
- Royce, E. (2008). *Poverty and power*. 배충효(역). (2009). <가난이 조정되고 있다>. 서울:명태.
- Scheufele, D. A. (2000). Agenda-setting, priming, and framing revisited: Another look at cognitive effects of political communication. *Mass Communication & Society*. 3(2). 297-316.
- Sennett, R. (2002). *Respect*. 유강은 (역) (2003). <불평등 사회의 인간존중>. 서울: 문예출판사.
- Sen, 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김원기 (역) (2013). <자유로서의 발전>. 서울: 갈라파고스.
- Thompson, E. P. (1966).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Vintage.
- Wolfinger, R. & Rosenstone, S. (1980). *Who votes?*. Yale University Press.
- Wilkinson, R. & Pickett, K. (2018). *The inner level*. 이은경(역). (2019). <불평등 트라우마>. 서울: 생각이음.

투 고 일 자: 2020년 10월 18일

심 사 일 자: 2020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20년 11월 25일

## Abstract

# Journalism Studies in the Socio-economically Deprived and Inequal Society

Young-Gil Chae

Professor,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is conducted in order to critique about the ways Journalism studies conceive deprivation and to problematize the abstractness about inequality through which to explore alternative academic practices. To meet this research purpose, first, we try to understand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poverty and inequality in Korea, and second, to identify concrete examples to discuss actual realities of communication environment of derived individuals and communities, and third, to discuss the limitations of the Journalism studies, and finally, based on this, we intend to discuss the future agendas of Journalism studies in Korea on this matter. Based on the analysis, we found that Korean journalism studies have been broadly established and expanded into a systematic research area by discovering the meaning and impact of communication elements and activities that the existing socio-economic poverty and inequality studies have not captured and theorized. This has significance that it expands the socio-polit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poverty and inequality, but it also shows clear limita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Korean journalism seems to have distributed a number of studies in <Type III> “Ambiguous ideological type” among the four types of poverty and insecurity. Based on these findings, I tried to discuss the future direction of journalism.

**KEYWORDS** Journalism, Political Communication, Poverty, Inequality, Communication inequality, Deliberative democracy